

한국경제성장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하여

김 경 동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1. 예비적 고찰

사회학적으로, 경제는 사회체계(social system)의 한 부분체계(sub-system)이므로 전체 사회체계 및 다른 부분체계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현상이어서 그러한 관계들 안에서 분석·이해한다. 경제는 또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의 하나인 동시에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의 한 유형이다. 이 모든 개념은 경제를 개인의 행위를 넘어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로 이해할 필요를 암시한다.

제도란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인도·지시하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의 한 집합체계(set)다. 그러한 규범은 개인으로서 인간의 욕구충족(need gratification)을 위해, 인간의 집합적인 삶의 조건인 사회의 원활한 기능수행(function)을 위해 만들어진 행위의 규칙(rules)이다.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여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수행을 하기 위한 사회적 행위의 틀/framework)로서 사회조직체(social organizations)를 구축하는 모습을 띠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제도의 양태다.

사회체계의 존속발전을 위해 필요한 4대 기본적 기능(적응, 목표달성, 사회통합, 잠재적 문화유형 유지와 긴장관리,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AGIL) 중에서 사회체계의 부분체계인 경제는 적응적 기능(adaptive function)을 주로 담당하는 제도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존속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사회 자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사회제도로서 경제는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의 적응기능수행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생산, 유통, 분배 활동을 주관하고자 각종의 경제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그 기능에 합당한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이행하며 작동한다.

사회학적 접근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도 부분체계이고 제도의 하나이므로 항상 전체 사회체계, 다른 부분체계 및 여타제도 등과 맺는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가 홀로 작용할 수 없고 경제의 건전성과 변화 내지 일탈은 곧 여타 부문의 체계와 제도의 건전성과 변화 내지 일탈과 밀접하게 연관 짓는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경제성장이 가능한 데는 국가와 기업부문의 정책이 주효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정책은 어떤 조직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수단적 방안을 공식화한 내용이다. 정책의 공식적인 정당성 확보와 실행은 제도적 틀 안에서 제도가 설정한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미처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방법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규범체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의 합법성이 중요한 대목이다.

사회학의 주제가 사회라는 집합현상이지만 사회는 개인이라는 인간구성원을 배제하고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개인 차원의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비롯하여 인간본성(human nature)과 관련있는 감정(emotions)과 정서(sentiments), 이성(reason)과 사유(reasoning), 감성(feelings)과 합리성(rationality) 같은 특질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작동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한다. 또한 동기부여(motivation)라든지 행동의 추동(drive) 요인도 분석에 포함시킨다. 이런 것이 집합적 행동에서 표출할 때 우리는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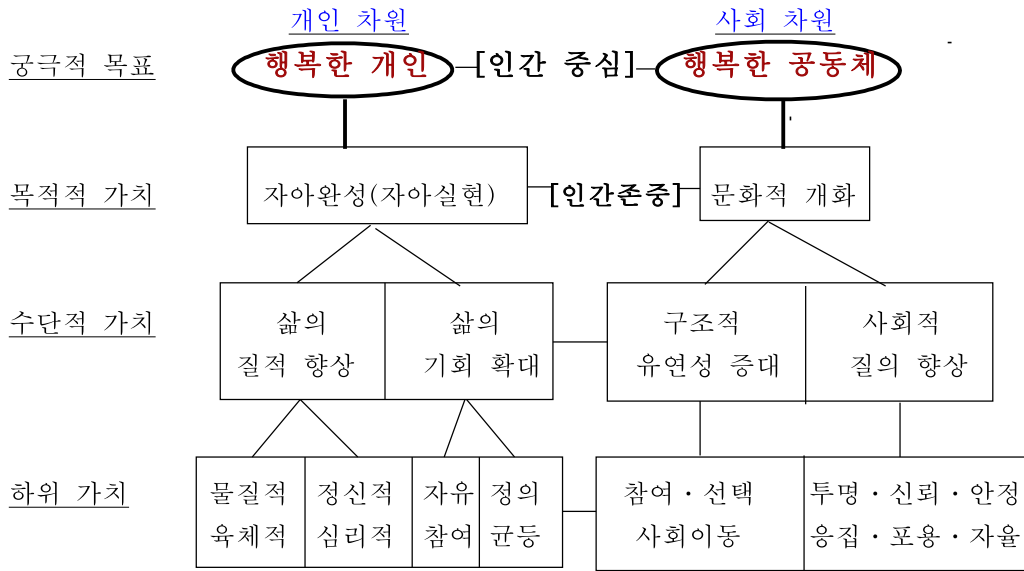
사회체계든 제도든 그 존재이유를 단순히 객관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만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가치는 주관성을 함축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의 행복추구와 관련이 있다. 다만 행복의 의미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문화적, 시대적으로 상대적이며, 개인적으로 주관성을 띠므로 이를 어느 정도는 객관화, 보편화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우리는 '삶의 가치'(Life Values)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좋은 삶'(good life)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하나의 개념틀로 엮으면 [그림 1]과 같은 도식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해설은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 경제가 기여하는 측면은 주로 물질적·육체적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데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이 도식이 암시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도 이러한 삶의 가치를 얼마나 충족해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발전의 핵심가치'(core development values)라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의 성장(economic growth)은 객관적 현상이고 경제의 개발(economic development)은 경제체계 자체의 변화를 지칭하며 이런 성장과 개발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발전(societal development)을 지향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한다. 이때 경제성장이나 개발이 과연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발전가치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삶의 가치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다는 뜻이다.

이제 경제현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사회학적 틀을 잠시 언급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의 행위인 동시에 거기에는 조직적 맥락이 필수다. 경제행위도 인간요소(human element)와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이라는 두 갈래 접근을 반드시 요한다. 인간요소는 사회구성원의 인적 자질(human, population quality)과 동기, 사회심리적 특질(traits)을 주로 관찰하는 데서 접근하고 사회조직은 그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principles of social organization)로 접근한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사회학적인 틀로써 고찰하고 그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에는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위에서 제시한 틀로

[그림 1] 삶의 가치체계



평가하는 일을 시도한다. 나아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지를 묻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할 것이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 인간요소

먼저 한국이 1960년대초부터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떤 인적 요소가 작용했는지를 개관한다.

① 박정희대통령(당시 혁명위 의장)이라는 리더십이 있었다. 그가 왜 그런 정책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문서가 남긴 애국심, 조국근대화, 빈곤퇴치 등의 공식적 동기 외에 개인적인 권력욕, 성취욕구 등을 추론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 다만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쿠데타라는 불법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② 국가지도자가 이끄는 국가정책입안자들의 자질이 여느 사회보다도 우수했다. 해외유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과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탱해온 관료의 선발방법이 고도의 교육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체제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성취욕구는 한국인 일반의 특질로서 널리 알려진 바다.

③ 경제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부문의 경영자, 관리자의 자질과 욕구수준도 위의 공직사회와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

④ 기업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근로자 역시 교육수준과 성취욕구, 노동동기 및 직무 헌신몰입도 등에서 특출했다는 점은 경험적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다.

이상은 주로 인간요소의 특징을 집합적 맥락이지만 개인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제는 집합적 특성을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지적하려 한다.

첫째는 한국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으로 특별히 강력한 민족의식이다. 반드시 민족주의라는 이념보다는 하나의 동질적 민족이라는 의식,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 타민족의 침략, 정복, 전쟁, 식민화 등 일방적인 타격과 그에 저항하여 민족정체를 온전하게 지켜 온 단일민족이라는 일말의 긍지가 있다. 그런데, 것처럼 우수한 민족이 수백년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국가로 근대화과 전쟁을 겪으며 허덕이고 있다는 자괴감이 한국인의 경제성장을 지향한 동기부여에 불을 질렀다.

둘째, 같은 맥락이지만 외세의 침략과 전쟁경험, 준전시 상태에서 지속하는 남북분단 등의 위협은 한국국민의 마음 곳에 은근히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 sense of insecurity 는 일종의 심리적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불안감을 떨칠 묘안이 필요한데 어디엔가 몰두할 때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여기에 묘약이 되어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셋째, 한국인에게는 특수한 감성적 요소가 있다. 이를 ‘한’(恨)이라는 한 글자로 집약할 수 있다. 우리의 집합적 심리 속에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 속국취급, 잦은 외세 침공, 특히 과거 역사에서는 우리보다 열등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문명을 배워간 야만족 일본의 손에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 같은 것은 그야말로 ‘천추의 한’(千秋遺恨)으로 남아 작동하였다. 놀라운 고도경제성장은 이 뿌리 깊은 민족적 한을 해소하는 한 바탕 ‘한 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풀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통로(channel)를 잡으면 복수나 적대적 행위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성과라는 긍정적인 길로 발산하면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넷째, 한풀이는 일종의 ‘기’(氣)의 발산이라 해석해도 좋다. 기라는 에너지는 집합적인 인구집단의 에너지로 취합현상이 일어났다가 어떤 주어진 목표를 향해 한꺼번에 쏟아 넣으면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한이 쌓이고 쌓여 에너지가 되어 있다가 주어진 통로를 타고 발산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섯째, 물론 여기에는 동기부여를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당시 한국민에게는 전쟁직후 미국을 위시한 대외원조에 의존하며 곤궁하기 짝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저들에게 우선적으로 빈곤퇴치는 주요한 유인이 될 수 있었고, “잘 살아보세!”와 같은 구호가 던져주는 심리적 자극은 한국인을 추동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외에 조금 더 긴 장래의 경제적 풍요까지를 기약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였다. 그러나 실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후부터는 보는 이마다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척 놀랍고 자랑스러웠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남이 인정해주는 ‘자리’(status)를 갖게 되는 것이 가장 뿌듯한 유인이었다. 흔히 한국사회를 ‘지위지향적 사회’(status-oriented society)로 규정하는 데, 바로 돈벌이가 되고 사장도 되고 남이 부러워하는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모두 지

위상징(status symbols)으로 과시효과를 노릴 거리가 되고도 남게 된 것이다.

요약컨대, 당시의 한국민은 누군가 불을 지르기만 하면 바로 일어서서 뛰기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와 자질을 알맞게 갖추고 있었던 형국이라 할 것이다. 그 자극제를 제공한 장본인이 국가적 지도자였고 그가 구심정이 되어 성취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조직원리

개인 구성원이 그러한 자질과 특성을 지녔다고 해도 이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사회차원의 기제가 필요하다.

① 기본적으로 한국은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중심주의 사회다. 이는 전통적인 뿌리를 가진 것으로, 나라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른다는 의식이다. 물론 오늘날 이에 대한 관념은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에서 이념의 개입으로 상당 정도 희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은 국가주도적 국가우위의 사회다.

② 또한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조직원리가 지배적이었고 현재도 이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권위주의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띤다. 우선 오랜 유교적 상하 위계서열적(hierachical) 사회질서의 전통과 일본이 가져다 심은 군국주의적·전제주의적·관료주의적·천황숭배의 권위주의(militaristic·autocratic·bureaucratic·emperor-worshipping authoritarianism)이라는 매우 독특한 식민지 유산, 거기에 전쟁과 쿠데타에서 군의 입지가 높아지고 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바뀐 가운데 군부출신의 정치집단이 표출한 군사문화의 확산 등이 그 것이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필요한 권위가 상당히 손상한 면도 있지만 권위주의는 근본적으로 사라지거나 약화하지 않았다. 이 요소는 비단 국가관료체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부문이나 심지어 시민사회부문에서도 유효한 원리다.

③ 동원체제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근대전 사회에서도 농사철이나 국가재난 시에는 늘 백성을 국가가 동원한 전통을 지녔었고, 일제시대에는 군국주의적 전쟁 수행 과정에서 항상 동원에 임하는 훈련을 쌓았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가 겪은 전쟁에서 다시 광범위하고 철저한 동원에 차출당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도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국제적 스포츠의 계기에는 국민이 불꽃 같이 들고 일어나 지원하고 응원하는 열기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④ 그 밖에도 한국사회를 좌우하는 조직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원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은 한 번 자극이 주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금세 열기가 오르고 화끈하게 무엇이든 하는 기분과다. 소위 감정주의(emotionalism)가 한국인의 기를 모으는 데 한 몫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누구나, 무슨 일이나 객관적, 수단적 관계보다는 개인적,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여 만사를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인정주의(personalism), 마찬가지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특수적 인연을 중시하여 서로

뚝고 지지하는 연고주의(connectionism), 가족주의가 중심이 되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등이 한국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⑤ 명분과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원리는 그럴싸한 명분만 주어지고 체면만 잘 세워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성향을 자아낸다. 반대로 명분에 어긋나고 체면을 훼손할 때는 가차 없이 갈등으로 돌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명분을 내세울 때는 상대방을 엄격히 재단하는 형식적 의례주의적 도덕주의(formalist, ritualistic moralism)가 발동하기도 한다.

3) 제도와 정책의 측면

물론 이 과정에서 시급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들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과 조직적 틀을 형성하면서 실천에 나섰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수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당시의 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유효하게 작동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면 결코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경제정책 자체를 상론한 필요는 없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 짚어줄 만한 내용만 개관한다. 특히 이 맥락에서 주목할 특징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종의 ‘혼합 체제’의 성격을 띠는 사실이다.

① 당시 정부가 내세운 경제개발 이념의 기초는 일종의 향도자본주의(嚮導資本主義, Guided Capitalism)라 명명하기도 한다. 시장경제 원리는 고수하되 국가가 경제 운용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념이다. 자본형성에서 비롯하여 각종 거시경제적 제도와 정책을 국가가 구상, 시행하고 시장부문이 여기에 동조, 협력하면서 국민경제체제를 움직인다는 원칙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국가중심주의적 정치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지향인 셈이다. 다만 국가중심주의나 향도자본주의나 간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부문이며 시장부문을 움직이는 핵심요소는 어디까지나 기업가정신이 인도하는 기업활동임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와 시장의 혼합형 경제다.

② 자본형성 과정도 국내 저축과 외채 등 외자 유치에서 시작하여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진행해온 점과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항상 지적한다. 여기에도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위시하여 저렴한 소비재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나아가 정보화산업으로 진행되는 단계적 전환이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동시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처럼 대외의존적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내 저축을 비롯한 각종의 규제나 불균형적 특혜 등으로 자본형성을 촉진한 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혼합형 경제로 볼 수 있다.

③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시책을 특징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말미암아 중소기업부문의 상대적 불이익과 낙후성을 자주 지적받아 왔다. 현시점에서는 대기업 부문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균형 잡힌 정책을 주목하기 시작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그 동안에는 대기업을 중시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호의존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도 고찰해보아야 한다. 특히 근대적, 공식적, 관료제적 부문(modern formal-bureaucratic, sector)과 근대전의 전통적 비공식 부문(premodern, traditional, informal sector) 사이에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협력과 제휴가 불가피했던 것도 놓쳐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 비공식 조직체야말로 실제 기여한 바가 크다는 논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일종의 혼합형 경제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

④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책을 추구하는 과정에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체하게 되었고 따라서 급격한 도시화 내지 과잉도시화가 일어나는 반 면 농촌이 낙후하는 불균형이 결과하였다. 현재는 정보화에 힘입어 상당히 기술집약적 농업의 성장이 일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농촌의 생활수준도 부분적으로 향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의 사회경제적 후진성과 빈곤층 문제는 일종의 선후진국 혼합형이라 할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4) 외부 환경의 영향

지금까지는 한국사회 내부의 사회학적 요인을 주로 다루었으나 실상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위치한 외부적 환경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분석의 대상은 국제적 여건이다.

①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이 처한 국제적 환경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야겠지만 우선 정치경제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냉전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제적 성격의 전쟁을 치른 직후라는 조건을 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는 당연히 한국의 전후 복구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미국은 냉전체제 하의 소련권의 세계제패를 적극 방지하고 미국중심 국제적 헤게모니 체계 형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위 후진지역 내지 미개발, 저개발 국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적극 추진하던 때다. 한국은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는 데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②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하면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국제적 분업체계가 비교적 뚜렷한 가운데 시장의 분할이 가능했고 한국과 같은 저임금 체계 하에서 생산한 저렴한 소비재를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였다.

③ 사회문화 부문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해야만 생존할 뿐 아니라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다는 필요에 의해서 활발한 국제적 교류에 참여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문화접변(international acculturation)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해외유학을 장려하였고 미국중심의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과 국민 계도에 활용하려 하였다. 이로써 우리가 보유했다고 자랑하는 잘 훈련받은 유능한 관료와 경영관리자층의 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④ 미국이라는 우산이 워낙 큰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우리가 외적인 지원이나 문화접변의 영향을 논할 때 흔히 놓치기 쉬운 요소가 바로 일본의 역할이다. 일제식민지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시대적 여건에서 경제든 문화교류든 일본어가 익숙한 세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앞마당에서 일어난 6. 25전쟁이 일본의 전후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하나의 상호의존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사회체계의 다른 부분과 동떨어져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의 변화는 다른 부분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작동에도 여타 부분의 간여가 수반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발전의 가치목표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고도 경제성장의 여파에는 명암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발전의 핵심가치, 즉 삶의 가치를 표준으로 삼아 잠시 검토한다. 먼저 [그림 1]의 맨 아래쪽 하위가치부터 살펴본다.

①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 측면에서 삶의 질은 눈부실 만큼 향상했다.

② 그러나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과연 질적 향상을 보게 되었는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긍정하기 어려운 면이 허다하다.

③ 삶의 기회 확충이라는 가치 중 자유와 참여 가치에서는 굴곡이 있었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과 사회적 자유화(societal liberalization)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경제개발 과정에서 상당 정도 희생과 억제가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시점에서 민주화와 자유화를 성취한 예는 우리나라 말고는 드문 것이 세계사적 현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④ 정의와 균등이라는 삶의 기회 가치에서는 초기성장 과정에는 gini-계수 같은 지표에 의한 자원분배 구조가 높은 불균형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커진 다음부터는 비교적 양호한 구조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1990년 후반의 환란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구조가 불평등 심화 내지 양극화로 흐르게 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려던 종속이론가들의 딜레마는 한국이 분명 국제적 종속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했는데도 성공적인 개발이 결과한 데 대한 설명이 궁했다는 것이었다. 그 해답은 한국이 비록 종속적 개발을 시도했지만 어느 나라(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는 분배구조 내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양호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에 나섰으므로 고도성장이 가능했다는 반종속이론을 제공하는 단서가 되었다.

⑤ 사회의 구조적 유연성(flexibility) 면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 하에서 경직성이 일반적으로 강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 맥락에서는 그런대로 선택과 사회이동의

기회는 열려 있었던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⑥ 한 편, 사회의 질적 특질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신뢰도, 안정성, 응집력, 포용도(배제의 반대) 그리고 자율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 있다.

⑦ 그러면 이로 인해서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는 얼마나 신장했고 사회의 문화적 개화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던가를 묻게 된다. 이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실현에 이르기 어려운 여건이 있고 아무리 기를 써도 한 사회의 문화가 활짝 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결과는 혼합적이다. 가능해진 정도와 제한이 존재하는 여건은 아직 뒤섞여 있지 완전히 열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⑧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사회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났느냐 하면 대답은 역시 "yes and no"의 혼합형이다.

그 이유의 일부나마 살펴봄직하다.

첫째, 고도경제성장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는 하지만 ‘고속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는 개인은 혼란스럽고 사회의 시스템은 적응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동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부분체계 사이에 지체현상이 나타나기 십상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술혁신의 속도와 그에 힘입은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해 이를 둘러싸고 사회가 기능하는 데 지침이 되어야 할 제도와 규범체계(법) 및 구성원의 행동유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느리고 뒤처지는 현상이다. 이를 두고 문화적·구조적 지체(cultural-structural lag)라고 하는데 이때 부분체계 혹은 제도부문 간의 불균형 변동과 상호적응의 압력 및 긴장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속도에서 생긴 지체와 퇴영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소위 기습(技習, techniways)이라 하여 새로운 기기 같은 것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교통사고 등 실수가 두드러진다.

둘째, 편파성에 의한 왜곡이 심각하다. ① 소위 ‘경제제일주의’라는 명목의 경제일변도 개발정책은 정치적 퇴행과 정신적 황폐를 초래하였다. ②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농업 퇴영, 농촌 후진, 도시폭주 등의 문제를 자아내었다. ③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분배측면에 소홀했다. ④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성장은 경쟁을 격화시켰다. ⑤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조직의 증가와 복합화로 관료주의가 창궐하게 되었다. ⑥ 인구생태적 측면에서 환경오염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주택, 도로 등)가 발생하였다.

셋째, 과도성(過度性)의 문제가 있다. 과속의 폐해를 이미 지적했지만 과열경쟁, 과열과외, 과도한 과시(誇示), 과분한 욕구분출, 과격한 사회갈등, 과밀도시에 과도한 아파트 열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등장하였다.

넷째, 기타 고도성장의 음지는 주로 인간의 정신적 황폐, 즉 가치관의 혼란과 규범체계의 교란,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공동체 붕괴와 권위의 실추로 인한 질서의 혼

선,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창궐, 욕구의 다양화와 기대수주의 상승, '3D 징후군'처럼 일에 대한 헌신의 약화 등 여러 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가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선진사회를 성취할 수 있을 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회가 구체적으로 구비하기를 요구하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은 무엇이며 시급히 전환해야 할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가? 해설은 생략하고 항목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진사회의 전제요건

- ① 지속적 경제성장
- ②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태계의 보호와 생명존중
- ③ 시민민주정치적 정착과 발전
- ④ 정의롭고 푸근한 복지사회의 실현
- ⑤ 도덕사회의 건설
- ⑥ 문화적으로 풍요한 사회
- ⑦ 인간을 위한 창의성·도덕성 교육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모든 분야의 혁신은 상호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경제만 일구면 된다는 경제일변도의 시책을 추구한 결과 정치과행이 일어나고 사회갈등이 격화하는 현상을 목도했으며 정신적인 황폐도 목도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경제가 충격을 받는 사태가 한 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경유착에다 정쟁, 거기에 관치경제까지 겹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니 국민 경제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스템 정비를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2) 선진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위에서 제시한 선진사회의 전제요건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런 전환을 요청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개략적으로나마 필요할 것 같다.

(1) 패러다임 전환의 이유

왜 이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시대적 요구

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에게서 부정부패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규칙 준수, 권위 회복, 질서 정착으로 부정부패, 부조리, 비리, 편법주의를 극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를 정립하는 것이다(無權威, 無規範, 無常識, 無原則, 無秩序 탈피의 과제다).

둘째는 절실한 합리화다. 사고, 행동, 제도, 조직구성과 운영의 합리화가 절실하다(無涇渭, 無理, 無謀, 無分別, 無自覺, 無節制 극복)

셋째로는 불신의 시대, 이중성을 탈피하고 불신을 청산하며, '믿을 수 없는 사회'의 오명을 벗어야 하고, 신용사회로 정착하여 신의(信義)를 회복해야 한다(不信, 不正直 척결)

넷째는 도덕성의 회복이다. 진정한 선진사회의 요건으로 도덕성 회복(無道, 無廉, 無禮, 無恥 청산)을 이미 지적하였지만 이야말로 가장 고차적인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생활세계의 차원에서는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

다섯째로는 유연성의 강조다. 사고의 개방성, 의식의 유연성, 구조의 유연성, 국제적 개방성, 이념의 유연성 등을 갖추어야 국제환경에서 적응, 생존할 수 있다.

여섯째는 사회의식, 공공의식의 강화다. 사회적 무감각증을 치유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사회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가족, 친족 등 혈연, 학연, 지연, 직연(職緣), 도당, 패거리 등 연고주의와 협소한 집단이기주의를 초월한 전체 사회의 공공복지 지향의 공동체 의식(communitarian)에 기초한 공익정신,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즈 (noblesse oblige) 정신의 정착이 필요하다.

일곱째는 공정한 사회 이룩하기다. 특권과 자원의 배분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공정성이라든지, 경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당성 확보가 급선무다.

여덟째는 책임지는 사회의 이상을 추구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모두가 남의 탓만 하며 사회를 결국은 망가뜨리고 만다. 적당주의 타파, 국가, 기업, 가정 모든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각자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지는 사회가 절실하다(無責任, 無誠意, 不實, 不誠實, 不徹底 타파).

(2)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선진사회의 실현을 겨냥한 혁신과제와 추진전략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에서 출발해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진적인 시스템과 사람(social system & human element), 즉 인간요소와 사회조직원리다. 시스템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환경(자연, 국제사회 등)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균형과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위하여, 유연성, 효율성,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의 통합은 ① 기능적으로 분화한 부분집단, 하위시스템을 조정(coordination)해 주고, ②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상징적·문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③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균형과 조화는 ① 투입과 산출(input-output) 간의 균형, ② 사회적 에너지의 엔트로피(entropy) 방지, 그리고 ③ 여야, 노사,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정치와 경제, 경제와 문화 등 사회 각 부문 간의 음양변증법적 조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시스템의 인간요소로서 변화의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다. 요는 규칙준수(rule-abiding) 의식과 관행이 기본이다. 후진사회의 특징은 부정부패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적 투명성 실현의 전제조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뢰(trust)다.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스템의 합리화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1960년대 고도성장을 위하여 구축한 낡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지 못한 채 21세기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생존이 가능하고 성숙한 선진사회도 꿈꾸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핵심적 화두는 ‘시스템의 합리화’다. 그리고 시스템의 합리화를 이루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지금까지는 주로 인치(人治)에 의존해오던 시스템에서 법치(法治)로 변환하는 확실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도 규칙준수가 관건이다.

② 이를 위해서는 연고, 패거리를 탈피하고, 적재적소, 공정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인사(人事)가 기본이다.

③ 가능하면 개별 작업 시스템에서 공동작업, 팀워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④ 모든 일에 책임행정, 책임경영의 정신이 투철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한다.

3) 유능한 민족에게 필요한 구심점

(1) 국민의 저력

젊은 시절 이상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우수한 민족이면서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에 대한 일화는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생전의 강원용 목사님과 손자의 대화에서 대학생 손자가 던진 질문을 상기하고자 한다. “할아버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엉망인데 왜 안 망하지요?”라는 질문이었다. 이 목사님은 순간 충격을 삭이며 요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정말 한심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서 곧 망할 것 같은 데,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역시 우리 국민의 저력 때문이다. 우리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잿더미 속에서 털고 일어나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고도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민주화도 이룩한 것이나, 지난 번 IMF 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 모두가 거침없이 동참하여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무서운 저력을 지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민족이 유능하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 다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이 한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이러니가 개입한

다. 지도자는 과거 왕조시대가 아닌 이상 국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존재다. 지도자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어야 할 언덕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유능한 개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집단과 조직 속에서 집합적으로 일할 때는 갈등이 격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불합리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인이 특별히 긴급히 필요하고, 가정교육에서 사회성을 생활화하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창의력 계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개인 수준의 창의성 발휘도 순전히 개별적인 맥락에서는 중요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요즘 선진국에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이론의 개척과 기술혁신, 또는 사회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대부분 공동체적 협동의 맥락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는 유능한 개인을 한데 엮는 그 무엇이 필요한 사회다. 그 것을 우리는 사회의 구심점으로 보고자 한다.

(2) 절실한 구심점

그처럼 유능한 국민의 저력 즉 ‘기’(氣) 에너지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취합하여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신바람을 일으키는 구심점, 그리하여 진정으로 실수 없는 성숙한 선진사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구심점은 기본적으로 국가여야 한다. 국가가 통합기능의 중심에 서야 하고 국가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 형성하는 정치와 관료세계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는 갈등 당사자로 분열만 조장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2010. 6. 23) 「한국경제」 특집기사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담보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거기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다른 부문은 대체로 향상하는 데 비해, 정치와 관료부문이 급격한 퇴보를 보여주어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특출한 정치지도자가 따로 있어서 구심점으로 추앙받는 것도 아니다. 제도부문에서 정치 외에 구심점을 제공해야 할 주체는 종교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또한 스스로 갈등의 원천이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어디로 가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 대중매체의 스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집중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더 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참으로 딱한 현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는 아직도 국민의 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개방적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과거처럼 국가주도의 독주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데 힘을 모아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구심점

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야말로 바로 분권적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집합주의(decentralized, pluralistic, communitarian, collectivism) 원리에 입각한 자발적 사회의 특징인 셈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시민민주사회의 주역은 바로 시민사회의 구성원 모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올바른 시민민주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시민의 대표가 함께 염려하고 구상하고 만들어 나갈 책무가 주어졌음을 각성하고 이 일에 과감히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석은 바로 시민사회의 구성원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변신의 각오가 또한 엄청나다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운동의 이름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나친 이념화, 정치화에다 미숙한 결사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악명만 남긴 채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처절하게 성찰하고 거듭나기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도 그러한 이념과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이 빠진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을 위한 운동인 자원봉사 운동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3) 제도적 환경의 조성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성숙한 선진사회를 지향한 발전을 제대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간요소, 즉 사람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점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사회적 여건을 합리화하고, 특히 유인체제를 개선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일부 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우선 경제적 보상에서 너무나 미흡하였던 탓에 부정과 비리에 쉽사리 휘말리는 일이 일어났던 점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급선무다.

어차피 21세기의 사회는 다원화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과 지역과 집단은 각자 나름대로 전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바를 구상하고 다른 부문, 지역, 집단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 몫을 할 태세를 갖추어 필요가 있다. 그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의 원칙에서 할 것이며, 국가는 오로지 불가피할 때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족하다. 여기에 유연한 사회구조와 조직원리가 유효한 까닭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은 경직된 의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창의력이 번득이는 유연한 의식에서라야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체제다. 교육을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체제로 유지한다면 아무리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해도 근원적으로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일에서는 부족하다. 교육은 앞서서도 지적한대로 가정에서부터 비롯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재교육을 이어나가면서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혁신해야 한다.

4) 성숙사회의 지속적 역동성과 혁신의 필요성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소망과 의욕이 넘치지만 사실상 우리사회는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요한 발전적인 업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모로 시행착오와 후퇴와 정체기가 있었다. 지나치게 기복이 심한 것이 우리역사의 특징이기도 할 정도다. 그 모두가 준비성이 부족하고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취약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룩해가는 과정에서 도사리고 있을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항상 미리 해 놓는 것이 상책이다.

예전에 율곡선생 같은 이도 이런 경고를 하였다. 동방사상의 음양변증법적 순환 논리를 국가의 변화에 적용한 율곡은 창업(創業), 수성(守成) 및 경장(更張)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무슨 일이나 새로운 혁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제도를 갖추면 그것이 완숙하게 될 터이나, 그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수구적 성향이 강해진다. 그러면 낡은 습관과 의식이 타성이 되어 온갖 문제를 축적하여 결국은 또 다시 혁신이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성숙이라는 화두로 선진사회의 구축을 시도할 때는 성숙함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유혹 내지 함정에 조심해야 한다.

원래 동방사상의 음양변증법에 의하면 만사는 한 편으로 흘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삼라만상의 이치라는 한계의 원리(the Principle of Limit) 혹은 반(反)의 원리(the Principle of Return)가 있다. 비슷한 이론을 제시한 사회학자 Pitirim A. Sorokin은 성공이란 곧 그 안에 실패의 씨앗을 품는다는 논지로 한계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¹⁾ 이런 관념을 암시하는 『역경』(易經)의 대표적인 한 귀절만 소개한다.²⁾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가 안전하며, 멸망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존을 지키고, 혼란을 생각하면 다스림을 얻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전할 때 위험을 잊지 않고 생존을 영위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세상이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있을 때 무질서의 혼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안정되고 국가도 가히 보존할 수 있다(危者安其位者也 亡者保其存者也 亂者有其治者也 是故君子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難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5. 맺는 생각

한국의 경제개발을 사회학적인 안목에서 여러 각도로 고찰하려던 것이 어찌다가 미래를 지향한 발전의 이념과 전략까지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성취한 대로만 하면 장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동과 대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가 역동적인 가운데서

1)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나남, 1993) 참조.

2) 이가원, 『주역』(평범사, 1980), 469-470.

우리의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는 과업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시스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중시해야 한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의 차원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시장부문(기업부문)의 협조를 구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시민중심의 추진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국가위주의 운용방식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제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이런 방식의 소위 협치(協治, governance)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의 통치원리는 국가 독주형이 아니고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협력적 운영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 앞에 있다. 실지로 서방 선진국에서는 시민의 정치참여 형태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참여 모형을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저들이 적어도 수백년에 걸친 대표(의회)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자 그러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반세기 이상의 실험을 해 본 경험을 살려 이제 새로운 협치의 모형을 스스로 개척해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아직도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해매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시민사회 자체의 실정을 깊이 성찰하여 신선한 모형을 모색할 때도 되었다.



한국경제성장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하여

김경동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제도경제학 모임 (2010. 7. 9. 18: 30; KDI 회의실)



한국경제성장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하여

1. 예비적 고찰

- # 사회학적으로, 경제는 **사회체계**(social system)의 한 부분체계(sub-system)로서
 - * 전체 사회체계 및 다른 부분체계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작동하는 현상으로 분석·이해한다.
 - * 경제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의 하나인 동시에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의 한 유형
- # 이 모든 개념은 경제를 **개인**의 행위를 넘어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로 이해할 필요를 암시한다.



1. 예비적 고찰

- # 제도란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인도·지시하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의 한 집합체계(set)
- * 그 규범은 인간개체의 **욕구충족**(need gratification)을 위해,
- * 집합적 삶의 조건(사회)의 원활한 **기능수행**(function)을 위해 만들어진 행위의 **규칙**(rules)이다.
- * 이 규범을 준수하여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수행을 하기 위한 사회적 행위의 틀(framework)로서 **사회조직체**(social organizations)를 구비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제도의 양태다.
- # 사회체계의 **존속발전**을 위해 필요한 4대 기본적 기능(**적응, 목표달성, 사회통합, 잠재적 문화유형 유지와 긴장관리**,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AGIL) 중에서



1. 예비적 고찰

- * 경제는 **적응적 기능**(adaptive function)을 주로 담당하는 제도다.
- *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존속**할 수 있게 하고
- * 동시에 사회 자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 * 경제는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의 적응기능수행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생산, 유통, 분배** 활동을 주관하고자 각종의 경제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그 기능에 합당한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이행하며 작동
- # **사회학적 접근의 강조점**: 경제도 **부분체계**이고 **제도**이므로 전체 사회체계, 다른 부분체계 및 여타제도 등과 맺는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점
- * 이는 **경제**가 홀로 작용할 수 없고 경제의 건전성, 변화, 일탈은 곧 **여타** 부분의 체계와 제도의 건전성, 변화, 일탈과 밀접한 **연관성**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암시



1. 예비적 고찰

- # 경제성장은 국가와 기업부문의 정책이 주효해서 가능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 * 정책은 어떤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방안을 공식화한 내용으로 그 공식적 정당성 확보와 실행은 제도적 틀 안에서 제도가 설정한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 *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방법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제도(규범체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의 합법성이 중요한 대목이다.
- # 사회는 집합현상이지만 개인구성원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개인 차원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
- * 개인의 특징으로는 동기부여(motivation), 행동의 추동(drive) 요인도 분석에 포함시킨다.



1. 예비적 고찰

- * 또한 인간의 기본욕구, 인간본성(human nature)인 감정(emotions), 정서(sentiments), 이성(reason), 사유(reasoning), 감성(feelings), 합리성(rationality) 등 특질이 얽히고 설켜 작동함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
- * 이런 것이 집합적 행동에서 표출할 때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 #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사회체계든 제도든 존재이유를 단순히 객관적 기능적 측면에서만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 * 가치는 주관성을 함축하며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의 행복추구와 관련이 있다. 다만 행복의 의미의 모호성, 문화적, 시대적 상대성, 개인적 주관성 때문에 이를 객관화, 보편화할 필요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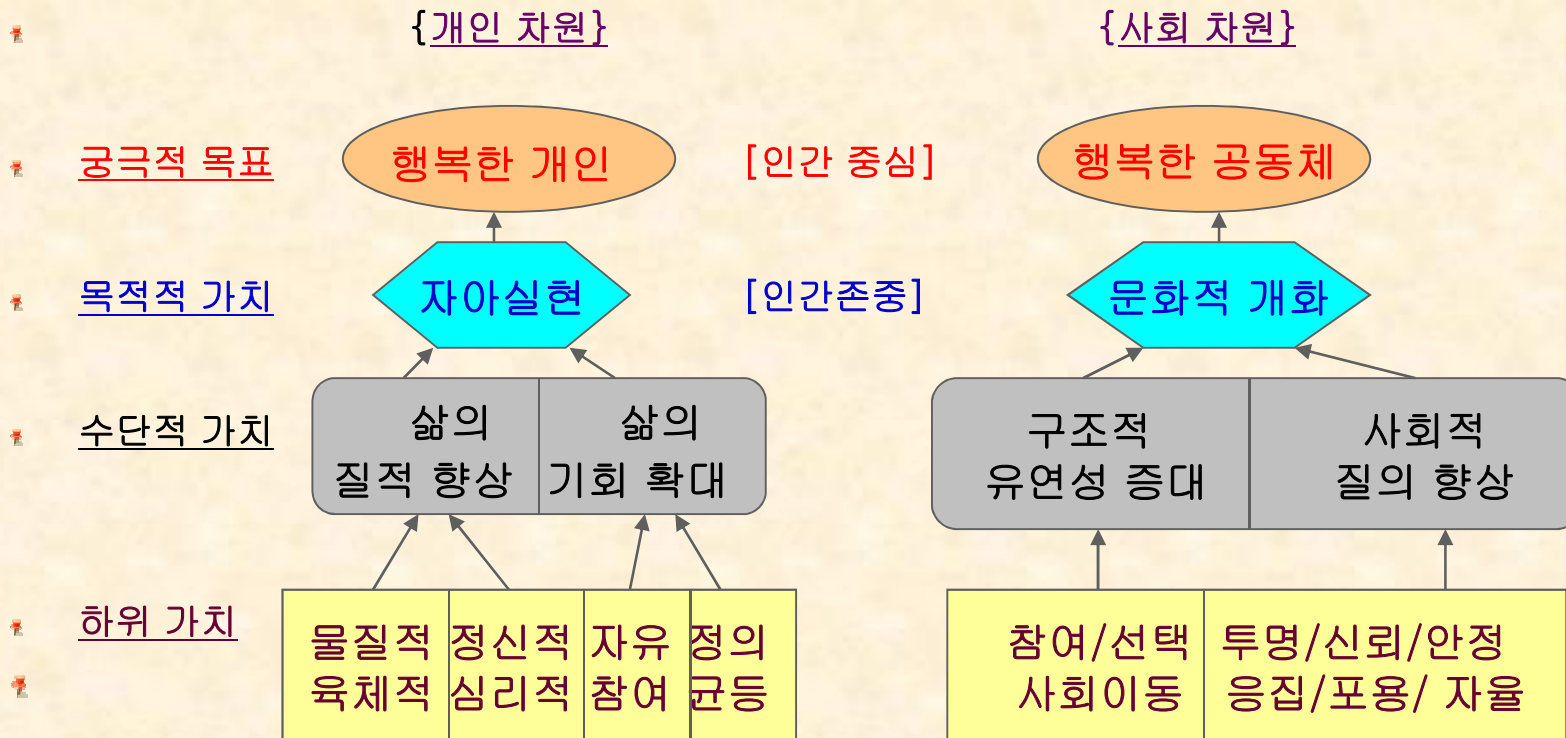
1. 예비적 고찰

- * 이를 우리는 ‘**삶의 가치**’(Life Values)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좋은 삶**’ (good life)을 지향한다는 뜻
- * 이것을 하나의 개념틀로 엮으면 [그림 1]과 같은 도식으로 집약할 수 있다.
- * 이 도식의 뜻은 사회의 발전도 인간의 **삶의 가치**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발전의 핵심가치**’(core development values)라 규정한다는 점이다.
- # 이렇게 보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객관적 현상이고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은 경제체계 자체의 변화를 지칭하며 경제 성장과 개발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societal development)을 지향하는 수단이라 인식한다.



1. 예비적 고찰

[그림 1] 삶의 가치체계





1. 예비적 고찰

- * 경제성장, 경제개발이 사회발전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여부를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삶의 **가치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를 평가.
- * **미래**의 발전을 위한 구상에도 이 가치를 적용한다.
- # 경제현상의 **사회학적** 분석의 틀은 **인간요소**(human element)와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의 두 갈래 접근을 반드시 요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의 행위인 동시에 조직적 맥락이 필수다.
- * 경제행위의 인간요소는 사회구성원의 **인적 자질**(human, population quality)과 동기, 사회심리적 특질(traits)을,
- * 사회조직은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principles of social organization)를 뜻한다.



1. 예비적 고찰

- # 지금부터 한국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 사회의 발전에 대한 **함의**를 평가하는 일을 시도한다.
- * 나아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묻고, 이를 위해서, 또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할 것이다.

1) 인간요소

- # 먼저 한국이 1960년대초부터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떤 **인적** 요소가 작용했는지를 개관한다.
- ① **박정희**대통령(당시 혁명위 의장)이라는 **리더십**이 있었다. 개인적 동기에 대해서는 문서가 남긴 애국심, 조국근대화, 빈곤퇴치 등의 **공식적** 동기 외에 **개인적**인 권력욕, 성취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 다만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쿠데타라는 불법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② 국가지도자가 이끄는 국가정책입안자들의 자질이 어느 사회보다도 우수했다.
- * 해외유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과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탱해온 관료의 선발방법이 고도의 교육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체제라는 점 때문이다.
- * 이들의 성취욕구는 한국민 일반의 특질로서 널리 알려진 바다.
- ③ 경제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부문의 경영자, 관리자의 자질과 욕구수준도 위의 공직사회와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 이제는 **집합적** 특성을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지적하려 한다.
- @ 첫째는 한국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으로 특별히 강력한 **민족의식**이다.
 - * 하나의 **동일민족**이라는 의식,
 - * 주변 강대국 타민족의 타격에 저항하여 **민족정체**를 온전하게 지켜 온 단일민족이라는 일말의 긍지
 - * 것처럼 우수한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국가로 허덕이고 있다는 **자괴감**이 한국인의 경제성장을 향한 동기부여에 불을 질렀다.
- @ 둘째, 외세침략과 전쟁, 준전시 상태의 남북분단 등 위협으로 간직하게 된 **불안감**(sense of insecurity)이 일종의 심리적 자극제
 - * 어떻게 해서든 이 불안감을 떨치는 데 경제성장 드라이브가 **묘약**이 되어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③ @ 셋째, 한국인에게는 ‘한’(恨)이라는 특수한 감성적 요소가 있다.
- * 우리의 집합적 심리 속에는 중국의 일방적 속국취급, 잦은 외세 침공, 특히 과거 역사에서는 우리보다 열등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문명을 배워간 야만족 일본의 손에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 같은 것은 그야말로 ‘천추의 한’(千秋遺恨)으로 남아 작동하였다.
- * 놀라운 고도경제성장은 이 뿌리 깊은 민족적 한을 해소하는 한 바탕 ‘한 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 한풀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통로(channel)를 잡으면 복수나 적대적 행위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성과라는 긍정적인 길로 발산하면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 넷째, 한풀이는 일종의 ‘기’(氣)의 발산이라 해석해도 좋다.
- * 기는 집합적인 인구집단의 에너지로 취합현상이 일어났다가 어떤 주어진 목표를 향해 한꺼번에 쏟아 놓으면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 * 한이 쌓이고 쌓여 에너지가 되어 있다가 경제성장이라는 주어진 통로를 타고 발산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 다섯째, 물론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했다.
- * 우선적으로 “잘 살아보세!”와 같은 빈곤퇴치는 주요한 유인이 될 수 있었고,
- * ‘지위지향적 사회’(status-oriented society)에서 돈벌이로 사장도 되고 고급 차 고급주택 등 지위상징(status symbols)으로 과시효과를 노릴 거리는 충분한 유인이 되기도 남았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2) 사회조직원리

❖ # 개인 구성원이 그러한 자질과 특성을 지녔다고 해도 이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사회차원**의 기제가 필요하다.

❖ ① 기본적으로 한국은 당시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뿌리를 가진 **국가중심주의** 사회다.

❖ ② 또한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조직원리가 지배적이었고 현재도 이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 * 유교적 **상하 위계서열적**(hierachical) 사회질서의 전통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 일본이 가져다 심은 **군국주의적. 전제주의적. 관료주의적. 천황숭배의 권위주의**(militaristic. autocratic. bureaucratic. emperor-worshipping authoritarianism)이라는 매우 독특한 식민지 유산
- * 전쟁과 쿠데타에서 군의 입지가 높아지고 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바뀐 가운데 군부출신의 정치집단이 표출한 **군사문화의 권위주의**
- * 민주화 운동의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필요한 **권위**가 상당히 손상한 면도 있지만 권위주의는 근본적으로 사라지거나 약화하지 않았다.
- * 이 요소는 비단 국가관료체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부문**이나 심지어 **시민사회부문, 민주화 운동** 내에서도 유효한 원리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③ 동원체제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 * 우리는 근대전 사회에서도 농사철이나 국가재난 시에는 늘 백성을 국가가 동원한 전통을 지녔었고,
- * 일제시대에는 군국주의적 전쟁 수행 과정에서 항상 동원에 임하는 훈련을 쌓았다.
- * 국내의 전쟁에서 다시 광범위하고 철저한 동원에 차출당한 경험을 쌓았다.
- * 지금도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국제적 스포츠의 계기에는 국민이 불꽃 같이 들고 일어나 지원하고 응원하는 열기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④ 기타 조직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동원에서 보듯이 한 번 자극이 주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금새 열기가 오르고 화끈하게 하는 **기분파다**.
- * 소위 **감성주의(emotionalism)**가 한국인의 기를 모으는 데 한 몫 하였다.
- * 같은 맥락에서 누구나, 무슨 일이나 객관적, 수단적 관계보다는 개인적,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여 만사를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인정주의(personalism)**,
- * 마찬가지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특수적 인연을 중시하여 서로 돕고 지지하는 **연고주의(connectionism)**,
- * 가족주의가 중심이 되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등이 한국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⑤ 명분과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원리는 그럴싸한 명분만 주어지고 체면만 잘 세워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성향을 자아낸다.
- * 반대로 명분에 어긋나고 체면을 훼손할 때는 가차 없이 갈등으로 돌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 * 명분을 내세울 때는 상대방을 엄격히 재단하는 형식적 의례주의적 도덕주의(formalist, ritualistic moralism)가 발동하기도 한다.

3) 제도와 정책의 측면

- # 이 과정에서 시급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들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과 조직적 틀을 형성하면서 실천에 나섰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수반했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 여기서 경제정책 자체를 상론한 필요는 없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 짚어둘 만한 내용만 개관한다. 특히 이 맥락에서 주목할 특징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종의 ‘**혼합체제**’의 성격을 띠는 사실이다.
- ① 당시 정부가 내세운 경제개발 이념의 기조는 일종의 **향도자본주의** (嚮導資本主義, Guided Capitalism)라 명명하기도 한다.
- * 앞서 지적한 **국가중심주의적** 정치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지향이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부문**이며 시장부문을 움직이는 핵심요소는 기업가정신이 인도하는 기업활동임을 간과할 수 없다.
- * 다시 말해서 **민간**의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와 시장의 혼합형 경제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② 자본형성 과정도 수출주도 산업정책 등 **대외의존적**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내** 저축을 비롯한 각종의 규제나 불균형적 특혜 등으로 자본형성을 촉진한 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혼합형 경제로 볼 수 있다.
- ③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시책을 특징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말미암아 중소기업부문의 상대적 불이익과 낙후성을 자주 지적받아 왔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호의존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 * 특히 근대적, 공식적, 관료제적 부문(modern formal-bureaucratic, sector)과 **근대전의 전통적 비공식 부문**(premodern, traditional, informal sector) 사이에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협력과 제휴가 불가피했고 오히려 이 비공식 조직체야말로 실제 기여한 바가 큰 혼합형 경제의 사례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④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책을 추구하는 과정에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체하게 되었고 따라서 급격한 도시화 내지 과잉도시화가 일어나는 반면 **농촌**이 낙후하는 불균형이 결과하였다.
- * 현재는 **정보화**에 힘입어 기술집약적 농업의 성장이 일부 가능해지고 농촌의 생활수준도 부분적으로 향상한 것은 사실이나
- * 아직도 농촌의 사회경제적 **후진성**과 빈곤층 문제는 일종의 선후진국 혼합형이라 할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4) 외부 환경의 영향

- # 실상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위치한 외부적 환경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분석의 대상은 **국제적** 여건이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①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이 처한 국제적 환경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야겠지만 우선 **정치경제적** 요인
 - # 미국은 **냉전체제** 하의 소련권의 세계제패를 적극 방지하고 **미국중심 국제적 헤게모니 체계** 형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위 후진지역 내지 미개발, 저개발 국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적극 추진하던 때라서
 - * 한국은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 ②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하면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국제적 분업체계**가 비교적 뚜렷한 가운데 시장의 분할이 가능했고 한국과 같은 저임금 체계 하에서 생산한 저렴한 소비재를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였다



2. 한국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 ③ **사회문화** 부문: 필요에 의해서 활발한 국제적 교류에 참여
 - # **국제적 문화접변**(international acculturation)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외유학, 미국중심 외국 문물 수용, 교육과 국민 계도에 활용하였다.
 - * 이로써 우리가 보유했다고 자랑하는 잘 **훈련받은** 유능한 관료와 경영관리자 층의 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 ④ 미국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흔히 놓치기 쉬운 요소가 **일본**이다.
 - * 일제식민지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시대적 여건에서 **일본어**가 익숙한 세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 @ 하나의 상호의존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사회체계의 다른 부문과 동떨어져 일어나지 않는다.
- ❖ * 이 분석을 위해, 발전의 가치목표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 * 결론부터 말하면, 고도 경제성장의 여파에는 명암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 * 우선 앞에서 제시한 발전의 핵심가치, 즉 삶의 가치를 표준으로 삼아 [그림 1]의 맨 아래쪽 하위가치부터 살펴본다.
- ❖ ①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 측면의 삶의 질은 눈부실 만큼 향상했다.
- ❖ ② 그러나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질적 향상을 보게 되었는지 누구도 확실하게 긍정하기 어려운 면이 허다하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③ **삶의 기회** 확충의 가치 중 자유와 참여에서는 굴곡이 있었다.
 - *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과 **사회적 자유화**(societal liberalization)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경제개발 과정에서 상당 정도 **희생**과 억제가 따랐기 때문이다.
 - * 그럼에도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시점에서 민주화/자유화를 성취한 예는 드문 것이 **세계사적** 현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 ④ **정의와 균등**이라는 삶의 기회 가치에서는 한국이 분명 국제적 종속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했는데도 성공적인 개발이 결과한 데 대한 해답은
 - * 한국이 비록 **종속적** 개발을 시도했지만 여느 나라(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는 **분배구조** 내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양호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에 나섰으므로 고도성장이 가능했다는 **대안적 종속이론**을 제공한 단서가 되었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⑤ 사회의 구조적 유연성(flexibility) 면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 하에서 경직성이 일반적으로 강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 맥락에서는 선택과 사회이동의 기회는 열려 있었던 편이었다.
- ⑥ 사회의 질적 특질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신뢰도, 안정성, 응집력, 포용도(배제의 반대) 그리고 자율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 있다.
- ⑦ 그러면 이로 인해서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는 얼마나 신장했고 사회의 문화적 개화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던가를 묻게 된다.
- *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결과는 혼합적이다. 가능해진 정도와 제한이 존재하는 여건은 아직 뒤섞여 있지 완전히 열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⑧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사회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났느냐 하면 대답은 역시 "yes and no"의 혼합형이다.
- @ 그 이유를 일부 살펴본다.
- # 첫째, 고도경제성장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는 하지만 ‘**고속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 *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개인은 **혼란**스럽고 사회의 시스템은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동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부분체계 사이에 **지체현상**이 나타나기 십상이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 특히 주목할 것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해
- * 이를 둘러싸고 사회가 기능하는 데 지침이 되어야 할 **제도와 규범 체계(법)** 및 **구성원의 행동유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느리고 뒤처지는 현상이다.
- * 이를 **문화적·구조적 지체**(cultural-structural lag)라 하는데 이때 부분체계 혹은 제도부문 간의 불균형 변동과 상호적응의 압력 및 긴장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 * 예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속도에서 생긴 지체와 퇴영
- * 일상생활에서도 소위 **기습**(技習, techniways)이라 하여 새로운 기기 같은 것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교통사고 등 실수가 두드러진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 둘째, **편파성**에 의한 왜곡이 심각하다.
- ① 소위 '**경제제일주의**'라는 명목의 경제일변도 개발정책은 정치적 퇴행과 정신적 황폐를 초래하였다.
- ②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농업 퇴영, 농촌 후진, 도시폭주 등의 문제를 자아내었다.
- ③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분배측면에 소홀했다.
- ④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성장은 **경쟁**을 격화시켰다.
- ⑤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조직의 증가와 복합화로 **관료주의**가 창궐하게 되었다.
- ⑥ **인구생태**적 측면에서 환경오염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주택, 도로 등)가 발생하였다.



3. 고도경제성장의 사회적 여파

- # 셋째, **과도성(過度性)**의 문제가 있다.
 - * 과속의 폐해를 이미 지적했지만 과열경쟁, 과열과외, 과도한 과시(誇示), 과분한 욕구분출, 과격한 사회갈등, 과밀도시에 과도한 아파트 열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등장하였다.
- # 넷째, 기타 고도성장의 **음지**는 주로
 - * 인간의 **정신적** 황폐, 즉 가치관의 혼란과 규범체계의 교란,
 - * 사회관계에서 **공동체** 붕괴와 권위의 실추로 인한 질서의 혼선,
 - *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창궐,
 - * **욕구**의 다양화와 기대수주의 상승, '3D 징후군'처럼 일에 대한 **헌신**의 **약화** 등 여러 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1) 선진사회의 전제요건

- ① 지속적 경제성장
- ②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태계의 보호와 생명존중
- ③ 시민민주정치의 정착과 발전
- ④ 정의롭고 푸근한 복지사회의 실현
- ⑤ 도덕사회의 건설
- ⑥ 문화적으로 풍요한 사회
- ⑦ 인간을 위한 창의성·도덕성 교육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모든 분야의 혁신은 상호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2) 선진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1) 패러다임 전환의 이유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 첫째는 우리에게서 부정부패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규칙 준수, 권위 회복, 질서 정착으로 부정부패, 부조리, 비리, 편법주의를 극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를 정립하는 것이다(無權威, 無規範, 無常識, 無原則, 無秩序 탈피의 과제다).

@ 둘째는 절실한 **합리화**다. 사고, 행동, 제도, 조직구성과 운영의 합리화가 절실하다(無涇渭, 無理, 無謀, 無分別, 無自覺, 無節制 극복)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③ 셋째로는 불신의 시대, 이중성을 탈피하고 불신을 청산하며, ‘믿을 수 없는 사회’의 오명을 벗어나야 하고, **신용사회**로 정착하여 신의(信義)를 회복해야 한다(不信, 不正直 척결)
- ④ 넷째는 **도덕성**의 회복이다. 진정한 선진사회의 요건으로 도덕성 회복(無道, 無廉, 無禮, 無恥 청산)을 이미 지적하였지만 이야말로 가장 고차적인 시대적 요청이다.
 - * 그러나 생활세계의 차원에서는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
- ⑤ 다섯째로는 **유연성**의 강조다. 사고의 개방성, 의식의 유연성, 구조의 유연성, 국제적 개방성, 이념의 유연성 등을 갖추어야 국제환경에서 적응, 생존할 수 있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여섯째는 사회의식, **공공의식**의 강화다. 사회적 무감각증을 치유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사회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가족, 친족 등 혈연, 학연, 지연, 직연(職緣), 도당, 패거리 등 연고주의와 협소한 집단이기주의를 초월한 전체 사회의 공공복지 지향의 **공동체 의식**(communitarian)에 기초한 공익정신,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즈**(noblesse oblige) 정신의 정착이 필요하다.
- @ 일곱째는 **공정한** 사회다. 특권과 자원의 배분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공정성, 경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당성 확보가 급선무다.
- @ 여덟째는 **책임지는** 사회의 이상을 추구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모두가 남의 탓만 하며 사회를 결국은 망가뜨리고 만다. 적당주의 타파, 국가, 기업, 가정 모든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각자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지는 사회가 절실하다(無責任, 無誠意, 不實, 不誠實, 不徹底 타파).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2)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선진사회의 실현을 겨냥한 혁신과제와 추진전략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에서 시발해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진적인 **시스템과 사람**(social system & human element), 즉 인간요소와 사회조직원리다.
- * 시스템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환경(자연, 국제사회 등)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균형과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위하여, **유연성, 효율성,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 @ 사회의 통합은 ① 기능적으로 분화한 부분집단, 하위시스템을 **조정**(coordination)해주고, ②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상징적·문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③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① 투입과 산출(input-output) 간의 균형, ② 사회적 에너지의 엔트로피(entropy) 방지, 그리고 ③ 여야, 노사,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정치와 경제, 경제와 문화 등 사회 각 부문 간의 음양변증법적 조화를 추구한다.
- @ 사회적 자본은 시스템의 인간요소로서 변화의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다. 요는 규칙준수(rule-abiding) 의식과 관행이 기본이다. 후진사회의 특징은 부정부패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적 투명성 실현의 전제조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뢰(trust)다.
- @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스템의 합리화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1960년대 고도성장을 위하여 구축한 낡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지 못한 채 21세기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시스템의 합리화를 이루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지금까지는 주로 인치(人治)에 의존해오던 시스템에서 법치(法治)로 변환하는 확실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도 규칙준수가 관건이다.
- ② 이를 위해서는 연고, 패거리를 탈피하고, 적재적소, 공정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인사(人事)가 기본이다.
- ③ 가능하면 개별 작업 시스템에서 공동작업, 팀워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④ 모든 일에 책임행정, 책임경영의 정신이 투철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한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3) 유능한 민족에게 필요한 구심점

- # 우리민족은 무서운 **저력**을 지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민족이 **유능**하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 다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이 한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이러니가 개입한다.
- * **지도자**는 과거 왕조시대가 아닌 이상 국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존재다. 지도자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 * 앞으로 우리가 기대어야 할 언덕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유능한 개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집단과 조직 속에서 **집합적**으로 일할 때는 갈등이 격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불합리**가 자주 나타난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그러므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인이 특별히 긴급히 필요하고,
- *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사회성**을 생활화하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창의력 계발 교육을 위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 다만 앞으로는 **창의성** 발휘도 개별적인 맥락을 넘어 **공동체적 협동**의 맥락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능한 개인을 한데 엮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 @ 대표적인 예: 선진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이론**의 개척과 기술혁신, **사회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대부분 **집합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이것이 사회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것처럼 유능한 국민의 저력 즉 '기'(氣) 에너지를 다시 제대로 취합하여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신바람을 일으키는 **구심점**, 진정으로 실수 없는 성숙한 선진사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구심점은 기본적으로 **국가**여야 한다.
- * 국가가 **통합**기능의 중심에 서야 하고 국가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 * 그러나 국가를 형성하는 **정치**와 **관료계**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오히려 갈등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는 갈등 당사자로 분열만 조장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 * 최근(2010. 6. 23) 「한국경제」 특집기사: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 다른 부문은 대체로 향상하는 데 비해, **정치**와 **관료부문**이 유독 급격한 퇴보를 보여주어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그렇다고 특출한 **정치지도자**가 **구심점**으로 추앙받는 것도 아니다.
- # 제도부문에서도 정치 외에 구심점을 제공해야 할 주체는 **종교**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또한 스스로 갈등의 원천이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어디로 가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 오히려, 요즘은 **대중매체**의 스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집중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더 클 터이므로 그들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 게다가 국가는 아직도 국민의 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개방적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과거처럼 **국가주도의 독주**에 익숙해 있다.
- * 결국 **시민사회**에서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① @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시민민주사회**의 주역은 바로 시민사회의 구성원 모두이기 때문이다.
- * 고로, 지금부터는 올바른 시민민주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시민의 대표**가 함께 염려하고 구상하고 만들어 나갈 책무가 주어졌음을 각성하고 이 일에 과감히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 * 우리가 믿어야 할 구석은 바로 시민사회의 **구성원**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변신의 각오가 또한 엄청나다 할 것이다.
- * 이야말로 바로 **분권적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집합주의**(decentralized, pluralistic, communitarian, collectivism) 원리에 입각한 자발적 사회의 특징이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어차피 21세기의 사회는 **다원화**로 나아갈 것이므로 모든 부문과 지역과 집단은 **각자** 나름대로 전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바를 구상하고 다른 부문, 지역, 집단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 몫을 할 태세를 갖추어 필요가 있다.
- *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의 원칙에서 할 것이며, 국가는 오로지 불가피할 때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여기에 **유연한** 사회구조와 조직 원리가 유효한 까닭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은 경직된 의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창의력이 번득이는 유연한 의식에서야 가능하다.
- *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성숙한 선진사회를 지향한 발전을 제대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간요소**, 즉 사람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점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
과 제도와 사회적 여건의 **합리화**, 특히 **유인체제** 개선도 함께 추진
해야 한다.
- * 제도적 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체제**다.
- *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체제**로는 아무리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해
도 근원적으로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일에서는 부족하다.
- * 교육은 **가정**에서 비롯하여 평생동안 **재교육**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
절하게 적응할 수 있게 전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혁신해야 한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4) 성숙사회의 지속적 역동성과 혁신의 필요성

- #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요한 발전적인 업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후퇴와 정체가 있었다. 지나치게 기복이 심한 것이 우리역사의 특징이기도 할 정도다.
- * 모두가 준비성이 부족하고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취약했던 탓이다. 고로 앞으로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룩해가는 과정에서 도사리고 있을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항상 미리 해 놓는 것이 상책이다.
- * 예전에 율곡선생도 동방사상의 음양변증법적 순환논리를 국가의 변화에 적용하여 창업(創業), 수성(守成) 및 경장(更張)의 세 단계로 설명하면서 이런 경고를 하였다.



4.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 * 이런 관념을 암시하는 『역경』(易經)의 대표적인 한 귀절 소개한다.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가 안전하며, 멸망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존을 지키고, 혼란을 생각하면 다스림을 얻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전할 때 위험을 잊지 않고 생존을 영위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세상이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있을 때 무질서의 혼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안정되고 국가도 가히 보존할 수 있다(危者安其位 者也 亡者保其存者也 亂者有其治者也 是故君子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難 是以身 安而國家可保也)”



5. 맺는 생각

- ① 한국의 **경제개발**을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려던 것이 미래지향적 발전의 이념과 전략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 * 그 이유는 과거 우리가 경제성장을 성취한 대로만 하면 장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 * 사회의 변동과 대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가 역동적인 가운데서 **시스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중시해야 한다.
- * 현실적, 구체적 전략의 차원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시장부문(기업부문)과 협력, 모두가 동참하는 **시민중심**의 추진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국가위주**의 운용방식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5. 맺는 생각

- @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여태 이런 방식의 소위 **협치**(協治, governance)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 이제 21세기의 통치원리는 국가 **독주형**이 아니고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협력적** 운영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 앞에 있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시민의 정치참여 형태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참여 모형**을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 * 우리도 반세기 이상의 실험을 해 본 경험을 살려 이제 새로운 **협치**의 모형을 스스로 개척해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 더구나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시민사회** 자체의 실정을 깊이 **성찰**하여 **신선한 모형**을 모색할 때도 되었다.